VISION 7

외교·통일
국방·통상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튼튼한 4강 외교, 함께 잘사는 한반도

23 한·미동맹, 회복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새지평 창조'

-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플랜' 작성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 동아시아 신외교 협력시스템 구축

24 실용 대북정책,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변화 및 개방 유도'

- 북한 인권 개선 노력
-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
- 비핵·개방·3000 구상 액션플랜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대북지원모니터링제도 마련
-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25 첨단국방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국방은 국력이요 기술이요 경제다'

-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
- 육·해·공군의 합동전력 증강
- 군 복지 개선(특히 사병, 하급장교 주택 등)
-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국가보답
-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권익 개선

26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신뢰받는 세계국가가 되겠습니다.

'실용적 통상외교, 국제사회 기여'

-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 자원·에너지 관련 총리·특사 파견
-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
- 해외권역별 에너지 벨트 구축
-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 PKO(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 제정
-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 국제 NGO 협력 강화

VISION 7

외교·통일
국방·통상

목표 23

한·미동맹, 회복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새지평 창조'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플랜' 작성 /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의 재정립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수적인 국제외교의 틀입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근간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핵심적 역할과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미래 안보 수요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고, 한·미 양국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동맹관계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하여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한미방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전력극대화 및 미군 주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빠른 시일 안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달성을 위한 종합적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인식차 해소 및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의 다자안보 현실에 대비한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플랜'(가칭)을 작성하겠습니다.

■ 한·미 합동으로 전작권 전환 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역할 개념을 규정하고 역할달성 액션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공동방위체제 구축으로 현 연합방위체제보다 더욱 강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안보역량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하겠습니다.

■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안보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232 western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세부협력 강화

대한민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간 교류의 편의 및 소통의 원활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과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세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신외교 협력시스템 구축 / 상호호혜적 협력 모색

한·중·일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 중국, 일본 등과 양자·다자적 FTA를 체결 추진하고 북핵 문제 및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주요국가와 정상교류 및 고위급 정책대화를 추진하고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보호 및 중국 기업의 한국 유치 등 상호호혜적 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VISION 7

외교·통일
국방·통상

목표 24

실용 대북정책,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변화 및 개방 유도'

북한 인권 개선 노력 / 국제사회 공조체제 강화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엔은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과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국제공조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북한주민의 열악한 생활수준 및 비인간적 대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유엔 및 국제인권 NGO와의 연대 강화를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인권기금' 조성 및 북한인권 NGO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 236 western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 / 고령자 우선 자유왕래

남북평화통일 전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보다 큰 국민적 · 전세계적 관심과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이산가족의 상봉과 왕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산가족면회소(판문점)를 추가 설치하며, 고령자 우선으로 자유왕래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 이산가족의 상봉 및 결합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겠습니다.



비핵 · 개방 · 3000 구상 액션플랜 / 북한 핵폐기 우선

2 · 13합의와 10 · 3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신고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와 핵불능화 조치가 약속대로 조기에 완료되어야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기반위에 정착될 것입니다.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의 실천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폐기를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 **비핵 · 개방 · 3000 구상 추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위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조정 · 통합하겠습니다.

■ **비핵 · 개방 · 3000 구상 추진을 위한 남북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체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폐기 진전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비핵 · 개방 · 3000 구상 추진을 위해 우선 실행가능사업 일부 추진 및 전면적 준비에 착수하여 액션플랜에 따른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 · 검증 완료) → 2단계(북한의 핵폐기 이행) → 3단계(북핵폐기 완료)로 진행하겠습니다. 10년간 총 400억 달러 등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되, 우선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유치 및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북일관계개선자금 등도 활용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238 western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관계의 단계적 대응 및 국제공조

북핵폐기를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중·일·러 주요 4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 북핵폐기의 최우선적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남북대화, 대북지원, 경협사업 등 모든 남북관계에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 진전과정과 연계하여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습니다.

- 남북관계의 순차적, 단계적 대응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제7조에 의거 후속 총리회담을 추진하며 북핵상황 악화시에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정하겠습니다.

- 6자회담 관련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6자회담 관련국은 물론 EU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북핵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국제공조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 적극적 대화와 설득을 통한 평화적 노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북한핵의 불능화 및 신고의 조기완료를 위한 노력에 주력하면서 대북 설득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북핵문제 해결단계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검증완료 후 우선 사업을 먼저 추진하며 핵폐기를 위한 불능화와·신고 완료시에는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대북지원모니터링제도 마련 / 상호주의원칙 존중

북한에 대한 지원모니터링이 열악합니다. 남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 중 일부가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 유출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대북지원에 있어 투명한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1995년 이후 쌀 255만 톤이 지원되었는데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된 예산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북회담과 현장방문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측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북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모니터링 실적에 비례한 대북지원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 사업별 사전 국회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영심의기구를 개편하고 보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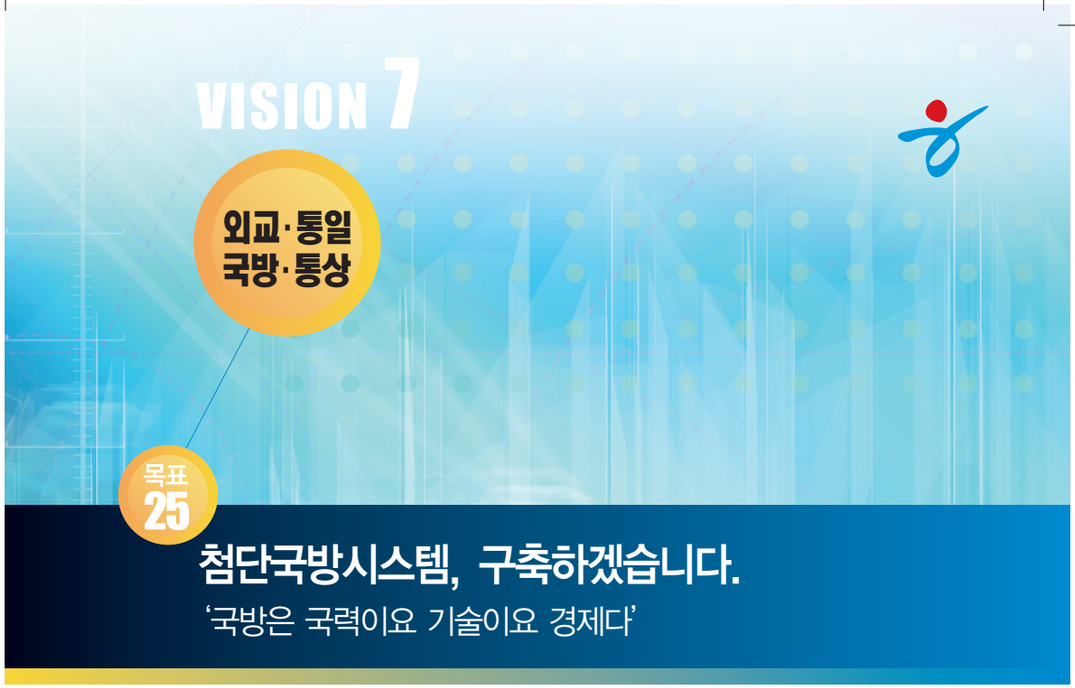
- 각종 대북지원사업에 상호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무조건 경제지원을 하기보다는 북한이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적 원칙을 지키며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 비무장지대 평화 상태 조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노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의 군사·안보적 측면, UNC와 협조, 북한과의 협조, 개발과 보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한반도 공동환경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통일도시, 생태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쌍방이 합의하고 각기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 등 남북 간 기존의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비무장지대 내 생태계 및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군사적 측면에서 중화기 철수, GOP 조정 및 단계적 철수 등 비무장지대 내의 평화상태를 조성하겠습니다. 3단계로 평화도시 건설, 생태공원 조성 등 남북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의 개선 등 상황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단계적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및 신속대응군 구축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미래에 예상되는 한반도 내·외의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위협에 대비한 첨단 정보과학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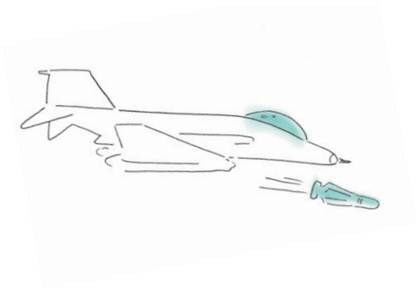
■ **미래전 중심의 군편제, 전략무기 중심의 무기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한반도 및 지역 군사위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미래형 군사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인정찰기 도입 확대 및 한국형 공격헬기를 전력화하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 확대(현재 3척 건조계획을 5척으로 확대), 최신형 미사일 요격체계 도입, 미래형 군사정보체계 및 인력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 242 western

■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전쟁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재래식 군사력(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에 의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테러 및 해상 해적행위와 같은 국제적 위협에 대비한 '신속대응군'을 구축하겠습니다.

■ 독자적인 전쟁억지력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을 위해, 현재 국방비가 GDP대비 3% 미만인 것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3% 초반까지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증액된 국방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정밀감시·정밀타격 능력향상에 투입하고 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 관련 부족재원에 충당하겠습니다.



육·해·공군의 합동전력 증강 / 미래형 핵심전력 양성

미래전 양상은 첨단전·정보전임을 고려하여 이에 걸맞은 3군의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 3군의 균형잡힌 발전 및 첨단화·정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육군은 '양' 위주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건설, 유지해 오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화·정예화하겠습니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체제 보완 및 조기경보기능을 확충하며, 해군은 영해를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해상무역로와 자원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 전력증강을 위해 최신형 무인정찰기를 사단급까지 확대 도입하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및 독도급 대형상륙함 도입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추가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며 최신형 미사일요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육·해·공군 각각의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군 전체의 '합동성'을 강화하여 미래전쟁환경 변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각 군의 합동성 제고 및 전력극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3군의 연계전력 강화를 통한 '합동성' 증강을 추진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 244 western

군 복지 개선(특히 사병, 하급장교 주택 등) / 사병 맞춤형 복지제도 신설 및 병영시설 조기 개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고생하는 군인들이 복지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군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병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같은 '사병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사병이 복무기간 중에 획득한 일정한 포인트를 병영 내에서는 복지관 이용, 전화카드 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및 외출, 외박 중에는 도서구입이나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화장실, 목욕탕 등 병영시설 개선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 장교 등 직업군인의 복지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직책별 특정 업무비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하며, 부족한 군간부 숙소를 우선 개선하겠습니다.

-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직업군인 및 유급지원병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 현실화, 복지개선, 제대 후 취업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현역병, 각종 전환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를 기본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 / 병무행정을 위한 '병역판정 옴부즈맨' 구성

병역이행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병역기피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 병역판정의 과정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병역비리를 근절하는 등 투명한 병무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역판정 옴부즈맨'(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병역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비리혐의자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처벌도 받고 군복무 기간도 연장하여 적용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246 western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국가 보답 /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개정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예우와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병역제도에 대한 회피문화가 근절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가산점 비율을 1~2%로 조정하여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군가산점제도' 를 재도입하겠습니다.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군복무기간을 군무경력에 산정하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공직 및 공기업, 일반기업 전반에 걸쳐 병역의무자에 대한 적절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권익 개선 / 군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재산권 행사 확대

현재 군사시설이 설치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지역 주민들은 사생활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이 심각합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할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확대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공군비행장을 조기에 이전하고, 전국의 해안철조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군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혜택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VISION 7

외교·통일
국방·통상

목표 26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신뢰받는 세계국가가 되겠습니다.

'실용적 통상외교, 국제사회 기여'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 세계 주요경제권과 FTA 추진

글로벌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FTA 체결 확대가 필요합니다. EU,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세계 각국과 다각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합니다.

- 세계적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EU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세안, BRICs 등 유망 신흥경제권 및 GCC, 호주, 남아공 등 자원부국과의 FTA를 추진하겠습니다. FTA를 통한 특혜관세수출비율을 지금의 10%에서 2013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유화와 개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제도와 규범을 정비하겠습니다. 통상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내적 보완대책을 면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한미FTA 이후를 위한 통상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통상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보강하여 대외 통상조직의 협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통상 및 자원 외교요원의 전문성과 대외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통상직 공무원의 채용 직후 연수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공·사기업을 망라한 국가차원의 통상·자원외교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연수과정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자원 공무원의 해외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주요 협력대상국(협력대상기관)에 일정기간 파견시키는 한편 외국 협력대상기관의 주요인사를 국내에 초청하고 내·외국 공무원 합동연수도 개최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 250 western

자원 · 에너지 관련 총리 · 특사 파견 / 자원 · 에너지 외교시스템 강화

자원과 에너지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본자원으로 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능동적인 외교활동과 시스템구축이 요구됩니다.

- 총리 · 특사 파견 등을 통한 적극적 자원 · 에너지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자원외교를 위한 외교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전 · 현직 및 민간부문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적 인사를 통상외교요원(특임대사 등)으로 적극 발굴, 활용하겠습니다.

- 에너지 외교의 종합적 추진 및 전략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해외공관에 자원 · 에너지 전문인력 확충 및 담당관 지정 등 자원 · 에너지 외교를 위한 외교시스템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 / 전략자원 안정적 확보

21세기는 에너지 안보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향후 국가간 분쟁의 대상도 에너지 확보로 귀결될 만큼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해외유전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식량, 에너지, 광물 등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입선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252 western

해외권역별 에너지 벨트 구축 / 에너지 실크로드 조성

국제외교의 환경변화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는 이제 중요한 국가안보문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에너지 안보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해외권역별로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 **전략자원의 도입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러시아(동시베리아·극동), 중앙아시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와 에너지 실크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지역별로 에너지와 자원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벨트도 구축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 재외국민 보호조치 강화

해외 파견 근로자 및 여행자 납치 빈발 등으로 심각한 재외국민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보호 상시 모니터링 실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안전관리, 재외국민보호시스템 정비,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재외국민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영사콜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여행 출국에서부터 귀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한글학교 지원 확대 및 한민족 문화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 254 western

PKO(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법 제정 / 국제평화유지활동 적극 참여

인권·문화·환경 등에 있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선진외교를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 PKO(국제평화유지활동)를 강화하겠습니다. PKO 파병 절차의 합리화·간소화를 위해 「PKO(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법」 입법을 추진, PKO 상비부대를 3,000 명 수준으로 상시 운용토록 하며 국제평화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 국제외교력 증대

세계13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해외개발원조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별·국가별 개발 수요에 따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OECD 일원 국가로서 책임있게 국제사회의 지구촌적 과제에 공동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 적극적인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안전한 세계평화 구축에 참여하고, 기여외교를 위해 해외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습니다. 개도국 등에 대한 ODA 규모를 2015년까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수준인 0.25%까지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 ODA 추진체제를 선진화하겠습니다. 2010년을 목표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진하고, 「대외원조기본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 인권·문화·환경 분야의 국제외교력을 증대토록 하는 한편 아프리카 AIDS 퇴치 등 후진국 공중보건서비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FQ)07한 나라 본 책(228~257) 2008.3.29 4:58 AM 페이지256 western

국제 NGO 협력 강화 / 해외청년봉사활동 권장

세계 각국 및 NGO와의 연대활동 강화를 통하여 반테러, 환경파괴, 빈곤, 마약, AIDS, 수자원 고갈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해외청년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청년층에게 국제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공여국으로서의 원조제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NGO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봉사활동을 통한 세계평화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